

정부 “한전 상반기 적자, ‘탈원전’ 때문 아냐”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시공 탓에 원전 정비일수 증가
“올해말 23기의 가동원전 중 최대 21기의 원전 가동”

정부는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올해 말 가동 원전이 늘어나면 한전도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한전의 상반기 적자의 주요 원인은 발전지회사의 연료비 증가와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비 증가 등이지 ‘탈원전’ 탓이 아니라고 15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유가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도 28% 동반 상승함에 따라 발전지회사의 연료비 부담은 26.7%(2조 원) 늘어났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원전 정비일수 증가 등에 따라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총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9.8%(2조1000억원) 증가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았던 이유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시공 탓에 보정 조치 등으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16년 6월 가동원전 전체를 점검한 결과 격납건물 철관부식(9기), 콘크리트 결합(11기) 등이 발견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호기별로 고리 3·4호기(각각 428일, 242일)는 격납건물 철관 정비로 정비 기간이 연장됐다. 신고리 1·2호기(363일, 1일)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정

비, 신고리 3호기(60일)는 가압기와 원전 방출밸브 정비가 지연의 원인이 됐다.

한빛 3·4·5·6호기(13일, 381일, 14일, 140일) 및 한울 2·5·6호기(78일, 6일, 13일)는 격납건물 철관, 콘크리트 공극 등이 주된 지연원인 이었다.

특히 ▲월성 1호기(379일) 수소감시기 설치 및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 결합 ▲월성 2호기(2일)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 결합 ▲월성 3호기(137일)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점검과 증수누출사건의 원인분석 등 ▲월성 4호기(4일) 신소용기 압력조절기 불꽃발생사건 대응조치 ▲신월성 2호기

(110일)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충격시험 오류 부품 정비 등이 주요 지연사유였다.

정비가 완료된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야 원인위 승인을 받고 순차적으로 재가동이 가능하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지원실장은 “올해말에는 23기의 가동원전 중 최대 21기의 원전이 가동돼 하반기 원전 이용률은 상승할 전망”이라며 “한전도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현장밀착형 릴레이 소상공인 협단체 소통 간담회’ 행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애로 및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릴레이 소상공인 협단체 소통 간담회’ 현장행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지난날 중순부터 소상공인협동조합(2곳), 중기중앙회전북지부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 음식업중앙회전북지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소통 간담회를 추진해온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주요 협단체 중 하나인 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를 방문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전북중기청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현황 정책의 취지 및 향후 정부지원을 통한 보전 방향을 설명하면서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으며, 미용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 및 견의사항, 부담 완화를 위한 의견 및 제도적 개선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애로 및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릴레이 소상공인 협단체 소통 간담회’ 현장행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을 제안했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업계에 당장은 어려움을 불러오겠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과 성장을 위한 미중률인 것으로, 앞으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서민경제에 온기가 들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 보전으로 추가 부담을 없앨 계획에 있다”며

/김영태 기자

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해를 당부 드리고,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애로·견의사항은 본부에 전달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에 앞장설 것이다. 계속해서 매주 릴레이로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장소통 간담회를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남원우체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남원우체국(국장 유기권)은 지난 14일 전자상거래와 연계하는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시청, 전북우정청, 우편사업 진흥회, 지역 농·특산물 판매업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우체국쇼핑이나 전북 달팽이장터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남원지역 김부각, 꿀, 추어탕, 잣, 유포 등 18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업체별 개별 상품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



행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활기차게 행사가 진행되었다.

유기권 남원 우체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체국쇼핑과 전북지방우정청이 운영하는 전북달팽이장터에 남원지역의 농·특산물을 입점시켜 남원지역 상품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 확대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남원시청 관계자는 “청정지역 남원의 맛과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을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업

/남원=김기두 기자

한다면 농가소득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금감원,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간소화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핵심사항 위주로 정비해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된 업무보고서 일부를 폐지하거나 보고주기·기한 등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최근 금융회사가 써 내야 할 업무보고서 수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업무보고서가 늘면 금융회사도 짧은 보고기한 내 임정치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데 이터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된다.

/김영태 기자

농신보, 폭염피해 농어업인 대상 보증지원대책 실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피해와 관련하여 농어업자 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농신보 보증지원 절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긴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억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은행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피해농가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농신보 관계자는 “폭염피해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폭염피해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농신보 보증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창구를 개설하여 적기에 피해농가에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전주시 생태도시국과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난 14일 전주시 생태도시국(국장 김종업)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태경 도회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 산업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주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정책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회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를 확대 해 줄 것과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관리 전담조직 신설’, ‘원·하도급사 동반성장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범주 확장’,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조경 수목식재공사의 유지관리비 계상’ 등을 건의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